

## 교수협의회 회장 회고록

변형운/80년대초 교수협의회장

나는 1960년대 후반에 부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그리고 회장 대리직을 약 3개월간 맡기도 했다. 그 때의 회장은 의대의 김성환교수였는데 임기중 정년 퇴임을 맞이한 탓으로 회장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부회장 2인 중 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의 협의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친목 등에 주력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후임회장은 문리대나 농대 등에서 나오기를 강하게 바랬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 들여 문리대의 이송녕 교수를 이사회에서 천거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나의 후임회장은 이송녕교수가 되었다. 그 뒤에는 협의회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삼선개헌, 유신 등의 시기에 협의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것은 1980년 3월초의 일이다. 2월중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법대를 대표하는 이사중의 한사람이었던 최기원교수가 나의 연구실로 와서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천될 것이라는 귀뜸을 미리 해주었다. 나는 무척 당황했지만 그대로 맡기로 했다.

그때는 바로 제2의 서울의 봄을 맞이한 시기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혹은 선도적으로 학원민주화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때 였으므로 그것을 수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협의회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간략한 취임사에서든 그런 생각을 밝힌 것으로 기억된다.

부회장 2인은 문과와 이과계에서 각각 내기로 하여 법대의 김철수 교수와 의대의 고광익 교수로 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될 이사들의 선출이 각 대학에서 행해졌는데 그 중에는 금년 3월까지 회장을 지낸 공대의 전용원 교수와 현회장인 사회대의 이상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첫 이사회는 4월 중순경에 교수회관의 현재의 제3회의실에서 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2시간여에 걸친 토의 끝에 학원민주화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회장인 김철수 교수에 맡기기로 하였다. 동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즉시 5.16전의 서울대학교 교수회의 성격,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 등을 비롯해서 일본 동경대학에 관한 자료, 미국, 영국, 독일등의 유명대학에 관한 자료 등을 모아 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수의 복지문제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은 것은 물론이다. 동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이상희 교수, 인문대의 이명현교수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정국의 흐름은 매우 불투명하였다. 민주화의 외침이 매우 드센 가운데 군

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학원에서도 학원민주화의 요구로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사립대에서의 학원분규는 심각했고 또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과 재단의 중간에 몰린 양심적인 교수들의 간절한 바람에 조금이나마 부응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래서 분규에 휘말리지 않은 타대학의 교수들의 선언 그리고 대학교수와 양심적인 지서인의 시국선언등에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5월 10일을 조금 지나서 이제까지 학내에서 토론, 규탄, 농성 등을 해 오던 학생들은 드디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5월 12,13일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내에서 철야농성을 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저녁 9시쯤 무장군인이 지금 정문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퍼지자 학생들은 농성을 풀고 해산했는데 그것이 거짓 소문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격해진 학생들은 캠퍼스를 뛰쳐나갔던 것이다. 사정은 타대학의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다. 어떻든 그 때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옴으로써 종로, 광화문, 시청, 미도파, 서울역광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영등포 일대도 성난 학생들의 물결로 메워졌고 그들은 지지부진한 개헌작업에 대한 불만, 이원집정제개헌음모에 대한 반대등 조속한 민주화조치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는 5월17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상황에 대한 서울대학교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언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시국선언을 내야할 때가 왔다는 이사들의 주장까지 있고 해서 교수시국선언을 내기로 하고 준비를 서둘러 5월 19일(월) 오전 10시에 이사회, 11시에 교수협의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시국선언(안)이 작성 완료된 것은 5월 17일(토) 저녁 가까워서였다. 문안작성은 학원민주화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주관했다. 물론 그 동안 이사들에게 5월 19일 이사회소집을 급히 알리는 한편 관악캠퍼스 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이사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그날 교수협의회로 오도록 하였다.

준비도 모두 끝나고 모처럼 많은 이사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저녁식사 때도 되고 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봉천동 네거리의 봉천동 고개 우측입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했다. 거사를 앞둔 탓인지 결연한 의지가 좌중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사를 끝낸 뒤 5월 19일의 이사회와 전체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MBC 9시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 끝머리에서 서울대학교수들이 5월 19일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과 우리의 주장 일부가 소개되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보도기관에서 우리의 시국선언(안)을 입수했을리는 없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인 5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뒤에

알고 보니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에 이미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8일(일)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계엄령이 내려져 공운단이 학교에 주둔하고 있어 일반교수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니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연락이었다. 이렇게 일반교수들의 학교출입이 금지되니 당연히 5월 19일의 모임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성된 서울대학교 시국선언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1980년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글의 끝에 자료로 들어 두기로 한다.

나는 약 1주일간 서울 근교의 어느 시골로 내려가서 지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교수들의 학교출입은 허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학교에 나갔으나 이미 교수협의회에 신경 쓸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7월 16일 저녁 합동수사부요원에 의해 남산으로 연행되어 7월 19일에 풀려났다. 당연히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심문조사도 받았다. 풀려나기 전에 과연 당하느냐 사표제출이냐의 강요된 선택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몸이 되어 나는 회장직을 부회장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었는데, 2인의 부회장 중 김철수 교수는 부회장마저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고광익 교수에게 떠맡길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8월 초 어느 날 7월 31일자로 해직되었음을 통고 받고, 정든 서울대학교직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4sis 1개월의 해직교수생활을 1984년 9월 1일자로 끝냈다. 그 날짜로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되었던 것이다. 전혀 교수협의회와는 관계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1987년의 6.29선언 이후 소위 서울대학교협의회도, 그렇게 불려도 가히 잘못이 아닌 그 동안의 동면기에서 벗어나 제2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준비기간을 거친 후 9월초에 총회가 열려 내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준비기간에 있었던 일은 이상희 교수에 의해서 뒤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수직에 복직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다시 맡았던 것이다.

1980년 때와 달라진 점은 부회장을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의치학계, 농수의계를 각각 대표하는 5인으로 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래서 인문대의 소광희 교수, 법대의 양승규 교수, 공대의 전용원 교수, 의대의 이상인 교수, 농대의 한인규 교수에게 각각 부회장직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사가 선출된 뒤에 교수회관에서 첫 이사회가 10월초에 열렸다. 여러 시간의 토의 끝에 '대학자율화 추진 분과위원회'를 우선 발족시키기로 했다. 위원은 이어나 이사가 추천하는 사람외에 대학자율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몇 몇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기로 했다. 이상희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1988년에 들어와서는 교수권익증진 분과위원회도 발족되었다. 구성방식은 대학자율화 추진 분과위원회의 그것과 같았다. 위원장으로는 전용원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들 분과위원회의 성과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 총장에게

제출된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방법” 국공립대학 교수 연구수당 50%인상 등이다. 그 밖의 1989년 2월까지의 교수협의회 활동은 「교수협의회 소식」에 기록되어 있다. 교수협의회간의 연대를 위해서 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10개 국립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를 1988년 2월 하순에 대전 유성에서 발족시킨 일이다. 그 이후 대전, 광주, 대구, 춘천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그때그때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정관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학년초에 열리기로 되어 있으므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긴 채 1989년 3월초의 정기총회에서 사임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 회장은 항상 임시총회인 9월에 선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료》 서울대학교 교수시국선언(안)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현 시국에 처하여 민주발전의 추구를 위한 기본방향과 우리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표명하고자 한다.

8.15광복이후 우리 국민은 자유·평등의 민주국가, 자주통일의 민족국가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염원하여 왔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민족사의 當爲의인 요청인 것이다.

舊 維新體制는 이러한 民族史의 요청에 명백히 逆行하는 것이었다. 一人獨裁의 장기화를 위한 誤導된 안보의식, 정기구조의 奇形化, 官權의 肥大化, 情報政治에 의한 人權·言論의 가혹한 彈壓, 경제적 불균등의 深化등이 民主力量을 억압하고 사회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團합을 沮害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過誤가 국민의 興望에 부응하는 새 憲法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서 是正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국이 날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過渡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부가 그 責務를 망각하고 있음에 起因한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民主發展의 政治日程을 밝히는데 주저함으로써 국민들의 信賴를 저버리고 있다.

過渡政府는 그 법적 근거와 구성의 失際를 볼 때 舊體制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기능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조속히 실현하도록 준비하는데 그쳐야 한다. 또한 우리가 현재 當面하고 있는 經濟의 難局은 과거 경제정책의 弊害이므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날로 가중되어 가는 국민경제생활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過渡政府의 존속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최근 加熱되고 있는 學生示威는 그들이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여 意思表示를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의 示威는 過渡政府의 爲政者들에 대한

反省의 促求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운동의 기본입장이 社會正義의 추구에 있다고 보며, 그 취지가 혹 일부 국민에게 오해되고 있는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公益과 正義에 바탕을 둔 民主社會의 실현은 우리 모두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各界各層이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振作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의 民主化에의 參與를 위촉 시키는 非常戒嚴은 즉각 해제되어야 하며, 國防의 중책을 맡고 있는 國軍은 民族史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民主化의 意志는 이와 같은 전제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過渡政府는 그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愛國的인 노력을 傾注하여야 하며, 國民의 指彈이나 疑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체 내의 諸要素를 과감히 剔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一員인 우리는 지금까지 知識人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大學 本然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民主發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급박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一. 過渡政府는 즉각 非常戒嚴을 解除하라.
- 一. 民主化의 障礙要因으로 指彈받고 있는 過渡政府의 一部人士는 즉각 辭退하라.
- 一. 過渡政府는 政權移讓을 조속히 단행하라.
- 一. 大學生은 街頭示威를 일단 中止하라.